

## 제14장, 제15장 관련 토론문 - 주체성과 정체성 사이에서 너머로

인문지리학 박사과정  
강석영

### 제14장 포스트식민, 탈식민, 반식민의 지리

근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동양과 서양, 서구와 아시아의 만남은 충돌로 이루어졌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문명의 접근은 이성 중심의 근대과학과 비교적 나태하고 시대착오적인 인식 간의 격돌이었다. 이러한 시각은 서구 열강들의 동양 진출에 합리적인 근거이자 근대 식민지론의 기본적인 접근방식이기도 하였다. 그야말로 '인식론적인 폭력'이자 원주 문화의 배제와 말살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발제자는 발제문을 통해 한국의 이중적 식민성과 탈식민 담론의 과제라는 주제를 통해 책에서 다루어졌던 식민주의 관련 이론들을 한국의 상황에 맞추어 정리하였다. '피해자'이자 '가해자'이며 '신식민주의'의 선봉으로서 자기비판과 성찰의 시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아직까지 여러부분에 있어 식민주의, 일제의 잔재 등이 남아 있으며 다원 세계이자 그러한 세계의 구성원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비판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그러한 과제를 수행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위해 두 가지의 이야기를 보태고자 한다. 첫 번째는 시간적인 층위와 개별 사건들의 관계성에 대한 정리이다. 한반도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본다면 지금으로부터 약 150년 간의 수많은 개별 사건들이 발생하였다. 그러한 사건들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다양한 층위와 관계성을 지니고 그야말로 스케일적으로 작용하였다. 어쩌면 운명론적 결정론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사건들의 결합으로 지금까지 흘러온 것이며 한반도라는 공간에서 일어난 특수한 사건들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150년 간의 수많은 사건들이 비교적 짧은 시간에서 일어났고 관계성에 대해서 정리 없이 새로운 사건들이 발생하였다. 개개별의 사건들은 조망되고 고찰되었으나 관계성은 총체적으로 매듭지어지지 못했다. 결국 시간과 공간 두 가지 안에서 움직이는 존재들은 주체적으로 정체성을 확인 받지 못하고 혼란한 상황에 마주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광복과 한국전쟁, 학살, 이념갈등, 민주화운동, 지역갈등, 세대갈등 등의 사건들이 살피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조명이 아니라 비교적 다수가 공감하고 인정하는 정리가 필요했다. 100년의 시간동안 우선적으로 해체되고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가 아직도 있기 때문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 과제들을 해결한 뒤에 그 다음 세계 속 구성원의 과제 수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우리가 공감하는 주체성과 정체성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 제15장 흑인지리학과 지리학에서의 배제

흑인으로 대표되는 '배제'에 대해서 책에서 언급하고 있다. 앞서서 지리학의 확산과 자리매김은 근대와 제국주의, 서구 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언급하며 식민주의까지 논의가 이어진다. 지리학적 인식론은 정치·사회적 목적에 의해 통제되고 조정되었다.

지리학의 절대성에 대한 논의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아야하고 이는 근대 지리학이 효율성과 합리성을 강조하며 제국주의, 백인중심주의, 식민주의적인 관점을 담고 있기 때문에 더 주의깊게 봐야하기 때문이다.

한편, 지리학의 틀 속에서 '배제' 즉 '선택되지 못한' 것들은 상당히 많다. '지도'를 제작할 때부터 사회의 시각, 주변 환경의 영향, 개인의 경험 등을 통해 다양한 요소 중 배제되고 선택되기 마련이다. 발제자가 말한 것처럼 다원성과 지역성, 문화적 인식론에 대해 논의할 때 선택받지 못하고 배제된 것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바라보아야 하는 지에 대해 고민해야할 것이다. 이런 지점에서 발제자가 논의한 토론거리에 대해

답을 하며 정리해보고자 한다.

1. 한국 또는 한반도의 근대지리학의 발전과정에서 배제되었던 우리나라의 지리적 요소에 대한 부분이다. 토론자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그 때 당시 아시아 권역의 식민지화 된 공간과 대상 중 한반도는 다면적인 공간이었던 것으로 인식된다. 근대 서구 열강의 식민지는 일반적으로 과잉생산된 공산품을 소비하는 곳이며 원재료와 노동력 등을 공급받는 본토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공간이었다면 한반도는 여러 세력들의 각축전이 펼쳐지는 무대이자 아시아의 최대 교두보이며 일제라는 신흥 제국주의 열강의 존립이 달린 공간이었다. 그래서 다른 식민지공간보다 훨씬 토지에 대한 설계가 민감하고 밀접하게 되어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은 지금까지도 인식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생각된다.

극단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 한국의 근대지리학의 발전과정에서 땅을 제외한 모든 지리적 요소들이 배제되었다고 생각하며 바다, 섬, 인간, 종교, 문화 등의 요소는 부차적이거나 토지와 관련된 지리적인 요소로 인식한다고 생각한다.

2. 다각적인 광역시와 23부제에 대한 논의는 결국 메가시티 대형지역권역과도 연결된다고 생각한다. 23부제의 경우 그 당시 지역의 권역에서 가장 큰 도시를 중심으로 지역을 권역화 한 것이다. 지금의 대형지역권역인 메가시티라고 유사하다고 여겨진다. 생활권을 중심으로 주요 도시 및 행정권역과 주변부를 합쳐 대형지역권역을 형성하는 것이 메가시티의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생동하는 지역 공간들이 이러한 다각적인 지역권역으로만 존재하거나 운영될 경우 변동성에 대해 수용이나 보완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23부제도 당시의 지금의 광역이라고 할 수 있는 도(道)에서 큰 주요 중심도시를 중심으로 개편한 것인데 지금은 주요도시에서 떨어진 지역과 도시를 확인 할 수 있다.

그래서 23부제나 광역자치도를 제외하자는 얘기가 아직까지는 다수의 공감을 얻지 못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되며 오히려 요즘의 메가시티 논의가 '기초' 단위가 아닌 '광역'단위에 힘을 더 실리는 이유가 중심과 주변에 있어 중심을 선호하는 것이 극단으로 치달은 것이라 생각된다. '기초'에서의 의미가 지금 사람들에게 크게 있기 보다는 서울, 경기, 강원, 전라, 충청, 경상, 제주 등 광역의 단위가 더 밀접하다고 느껴진다. 송파사람이 아니라 서울사람이고 천안사람보다는 충청이나 수도권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자 한다고 느껴진다.

공간이 정체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택할 수 있는 시대에기에 권역의 조정이 실질적인 조치인지는 확인이 더 필요하다. 공간에서 느끼는 소속감 보다 공간을 통해 정해지는 존재들의 주체성은 결국 정체성을 기반으로 정립되는 것이 더 알맞은 것 같다.